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

I. 들어가며

-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변함.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합의)으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난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평양선언)을 계기로 다시 작동하고 있음
- 미국 백악관의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함
- 지난 9월 7일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 만난 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최설희 vs 스티븐 비건)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옴
-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선(先)비핵화 조치와 관련하여 북미 간의 이견으로 북미 실무회담이 정체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 역할은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다시 부각됨
-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북미협상의 중재 역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짐
- 정치 분야에서는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의 상시화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마련됨. 지난 9월 14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군사 분야에서는 남과 북미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해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군사합의가 타결됨

-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남과 북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남북간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됨

II.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으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시도하였으며,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남특사로 보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함
 -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2017년 11월 29일까지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과 44차례의 다종의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를 시도함
 - 미국 뉴욕타임스는 2017년 9월 이러한 북한의 행도를 ‘미치광이 전략’으로 표현하며,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
 -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끝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대화로의 전환
 -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과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김여정이 방남
 - 문 대통령은 4월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을 평양에 대북 특사로 파견함
 -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답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4월 말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할 것임을 확인함
-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4.9)와 제13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4.11),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4.20)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은 결정함
 - 북한은 이상의 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완성 및 핵무기 병기화 완수 천명 △남북정상회담 일정 공표 및 북미회담 거론 4월 21일부터 핵·ICBM 시험 발사 중지 및 북부 핵시험장 폐기 △핵무기·핵기술 이전 금지 △사회주의 경제에 총집중 △평화·안정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

와 긴밀히 연계·대화 추진 등을 채택함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오후 2차례 회담과 만찬 진행하였으며, 양 정상은 오후 공동 식수 및 판문점 경내 친교 산책을 진행함
-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협의하고 「판문점선언」에 각각 합의함
- 4월 17일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부활절 주말(3.31~4.1)”에 극비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보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오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정은과 만났다”고 확인
-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대가로 경제지원과 체제 안정을 요구했다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관련 만족한 합의에 도달, 미국인(한국계) 억류자 3명 석방 및 송환
- 미국은 6월 5일(현지시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2018년 6월 12일 ‘세기의 담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합의」를 채택하고 성공적으로 끝났음
- 두 정상은 오전 9시(현지시간) 성조기와 인공기가 교차 배치된 회담장 입구 양쪽에서 약 10초간 악수와 함께 간단한 담소를 나눈 후 단독회담장으로 이동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성공할 것”이라며 “만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으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언급

- 북미 확대정상회담 개최, 이 자리에는 미국측 존 켈리(John Kelly)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리비아식 해결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불만을 촉발했던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북한측은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리수영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
-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이후 오찬을 함께한 두 정상은 이후 예정에 없었던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을 가지고,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미군 유예 송환 등에 합의함
- 2018년 9월 5일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5명)으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
- 6.12 북미회담 이후 남북은 6월 22일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일정(8.20-26일 금강산) 합의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침
-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통해 분과회담 일정 합의 및 개최: 철도분과(6.26), 도로분과(6.28), 산림분과(7.4)를 개최하고, 10월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함
- 2018년 8월 18일 남북 아시안게임 공동입장(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획득
-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하여, 남북회담 장소로 활용
-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9월 19일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발전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평양선언에 서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문제 △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추진 등임

Ⅲ.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

가) 북한이 왜 대화테이블로 나왔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북한은 일관되게 여러 차례 2017년까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부터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모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전략적으로 기획하였다고 주장함
 -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제안함
 - 따라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2013년 3월 “국가 핵병진 노선” 채택 이후, 핵무력 완성을 달성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임
 -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대신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체제안전보장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북한의 주장과 다름. 즉,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 것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때문이며, 그 결과 미국은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 제재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최근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한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이며, “승인”(approve)를 두 차례 반복함
 - 이것은 미 백악관의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유엔총회에서 “우리는 무엇이 여기까지 오게 했

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최근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12일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적시한 제재 대상 466곳을 공개하였고, 한국의 주요 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에 직접 전화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함을 강조함
- 현재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에 나서달라는 뜻을 피력함
- “북한이 왜 대화 테이블로 나왔는가”에 대한 북미 정책결정자 사이에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향후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대응조치(corresponding measures)를 두고 양국의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음
-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난 7일 4차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종전선언보다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음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16일 보도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만큼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先비핵화 조치는 북한이 보유한 핵 목록(inventory)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의미하나,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를 완료한 이상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제재 완화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취해야 할 미국의 대응행동이라고 주장함
- 따라서 향후 북미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북미간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북미 실무협상을 낙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대북제재의 충돌

-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지난 4월「판문점선언」의 합의 사항인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남북 두 정상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포함해 모두 네 개항의 경제협력에 합의함
 - 이를 위해 남북은 10월 15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날짜를 도출
 - 그러나 미 국무부는 최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0번의 유엔안보리결의안과 미국의 양자제재안의 포괄적 제재로 인해 남북경협은 한계를 맞고 있음
 -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2270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북한경제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됨
 - 2017년 7월 ICBM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결의안 2371호는 북한산 무연탄, 철, 납, 납광석과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함
 -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
 - 2017년 11월 ICBM 발사이후 채택된 2397호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민생목적은 허용, 그러나 총량은 제제한 통과이후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5,000톤 이하만 가능)와 정제류 금지(민생목적은 허용, 그러나 매 3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허용, 또한 총량은 2018년 1월 1일 이후 50만 배럴만 가능)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2270, 2321, 2371, 2375, 2397)은 북한의 연간 수출액인 약 30억불 이상을 봉쇄하는 법안임

- 미국은 2017년 8월 이란·러시아·북한 제재 현대화법 제정, 재무부 제재 대상 확대 발표, 대통령 행정명령(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또는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
-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라고도 불리는 이란, 러시아, 북한 통합 제재법은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의 발판 마련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강제하였으며, 북한 내에 만연했던 '제재 무용론'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고위급합의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대북제재에 한계에 묶여 있음
- 무엇보다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대북제재의 해제 및 완화가 없다면 현재까지 남북합의 중 경제분야의 합의는 진행되기 어려움
- 어렵게 마련된 남북경협에 대한 합의안이 대북제재 막혀 시행되지 못한다면, 2018년 남북 간의 합의했던 여러 교류협력사업 또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중(美中)협력의 실종

- 지난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부정적 압력을 행사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옴
-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는 중국이 대북제재의 협력들을 깨고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전인 3월 25-28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첫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함

- 또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전인 5월 7-8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다롄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함
-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직후 6월 19일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주석과 3차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함
- 중국이 북한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급격하게 가까워짐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임
 -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미정책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북중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관계로 북한은 미국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이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내재된 것임
 - 한반도 내에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당겨줄 북한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용인하면서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가려는데 자극을 받음
 - 북한은 중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해서 대북제재의 틀을 깨고 중국의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중 사이의 무역전쟁과 남중국해에서의 패권경쟁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중의 협력을 저해하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북한에게 가장 불리한 국제정치의 구도는 미중이 공통적 이해관계를 갖고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며, 반대로 최상의 구도는 미중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임
 - ‘세컨더리 보이콧’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제재의 의지가 중국의 비협조를 능가할 만큼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지역안정을 앞세워 언제든지 과거

로 회귀할 수 있음

- 키신저(Kissinger)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동북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임

IV. 대안

-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역과 북미관계의 영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매우 성공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임
 - 문제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뉨. 즉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를 먼저 추진하여 북미협상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관점은 북미협상의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임
 - 이 경계선을 나누는 기준점이 바로 대북제재임. 미국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가장 핵심 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해제와 완화 그리고 유예는 자신의 영역이라고 인식함(트럼프가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임)
 - 미국은 대북제재를 북한의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이르지 않으면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함
 - 대북제재는 북미간의 협상을 통해 풀어 가야 할 과제이며,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북제재의 영역은 북미관계에 맡기고 우리정부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톨릭 수장인 교황의 북한 방문,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로의 이행 등과 같은 평화분위기 조성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북미협상의 ‘역동성’(dynamism)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미 중간선거의 결과는 향후 북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과거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치러진 부시 행정부의 중간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참패로 끝이 났고, 그 결과 부시 행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을 버리고 2007년 2.13합의를 이끌어 냄
-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 중간선거의 결과도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정책은 중간선거 이후 전개될 것이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을 수 있음
- 핵무력 완성과 경제재건이라는 두 가지 국가발전전략을 내세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과연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에 대한 시각이 요구됨
- 미국을 북미협상의 장으로 끌어 들인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북한 내부의 엘리트 교체를 추진함
- 2016년 이후 핵과 미사일 정책을 주도했던 조선노동당의 최고 실세인 황병서 총치국장과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숙청하고, 최룡해를 조선노동당 최고 조직인 조직지도부 부장에 임명함
-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3년 3차 핵실험까지 핵개발의 주체는 당군수공업부이며, 핵실험의 주체는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 등 군부가 진행하는 2원체계로 운영함
- 그러나 2016년 4차 핵실험과 이후 44번의 탄도 미사일 실험은 개발과 실험의 주체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핵무기연구소와 전략사령부이며, 이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의 선군정치에서 조선노동당 중심의 권력 구조를 재정립하는데 핵과 미사일을 김정은의 혁명업적으로 내세워 추진함
- 따라서 2016년 이후 북한의 세 차례의 핵실험과 44번의 다(多)탄도 미사일 실험은 북한 내부의 엘리트 권력 구조가 군부에서 조선노동당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오히려 핵

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은 조선노동당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

V. 나가며....

- 남북이 합의했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합의가 진전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임
- 그동안 북미회담의 진행과정에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와 지는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중재 외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 그러나 북미협상은 오는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국내정치의 위상에서 재세팅될 가능성이 높음
- 그동안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했지만, 여전히 한미공조는 확고함. 그러나 한미 간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오히려 북미실무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의 힘이 발휘된 지금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가 성사되어, 북한의 핵신고 목록(inventory of nuclear arsenals)과 미국의 상응조치(countering measures)가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개한 인내를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